

#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sup>1)</sup>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혼에 대한 선택적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주혼인·주출산연령군은 25~29세에서 30~34세로 고연령화되었다.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출산 지연, 소자녀관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기회비용' 문제보다는 저학력(저소득) 여성의 '실질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출산 여력 감소 현상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육 인프라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양질의 양육 인프라, 서비스 확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 1. 들어가며

가치관과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가치관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심층적인 내면의 심리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결혼과 출산은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의 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에 가까웠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 선택적 차원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의 변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 본고는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내용 중 ‘제6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출산 행태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최근 가족가치관의 변화에서 ‘인식’과 ‘행태’ 간의 차이가 점차 미미해지는 현상은 결혼·출산 행태의 설명과 예측에서 가족가치관의 변화 분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가치관은 결혼, 출산, 자녀, 성역할 분담, 양육관 등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관적 태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혼·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률혼 중심의 출산문화가 보편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는 이러한 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출산력 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혼 여성(15~49세)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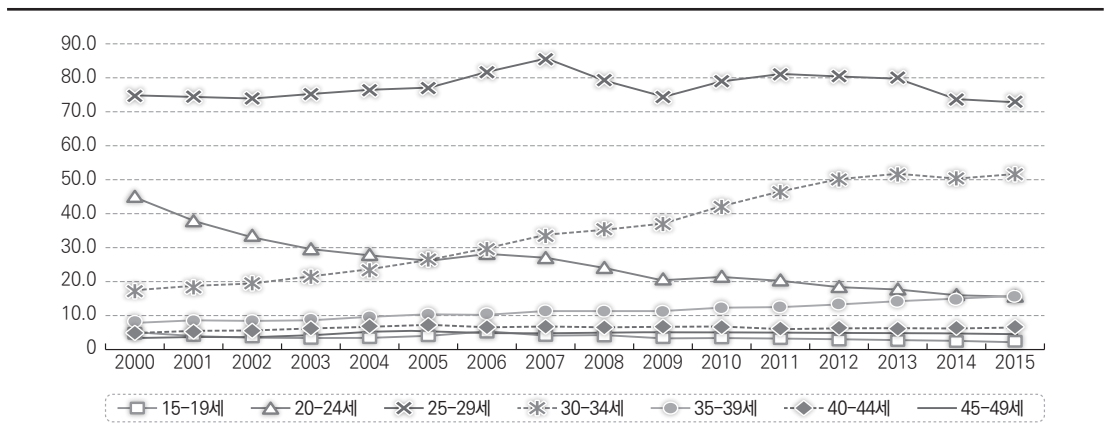
대로 저출산 및 가족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기혼 여성의 결혼 행태와 결혼가치관 변화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15~49세 가임기 여성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혼인율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을 기점으로 20~24세와 30~34세의 혼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25~29세는 비슷한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0~34세 연령군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혼인연령군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점진적으로 고연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여성(15~49세)의 연령별 혼인율 추이(2000~2015년)

(단위: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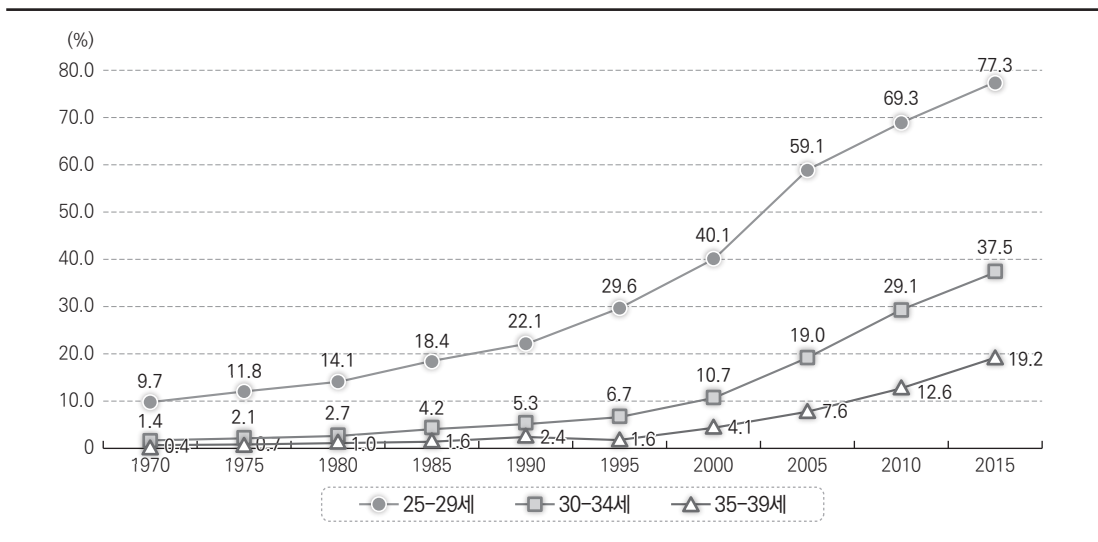
주: 연령별 혼인율(ASMR)은 특정 연령층에서 발생한 모든 혼인 건수를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 인구에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연령별로 발생한 혼인 건수/해당 연령층의 여자 인구 × 1000)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연령별 미혼자 비율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2000년대 이후 주혼인·주출산연령군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 주기 위해 이전 자료도 함께 제시하였다. 2000년 이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이던 미혼자 비율이

2000년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2015년 25~29세 연령층의 미혼자 비율은 40.1%에서 77.3%로 2배가량, 30~34세 연령층은 10.7%에서 37.5%로 3배가량, 35~39세 연령층은 4.1%에서 19.2%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그림 2).

그림 2. 여성의 연령별 미혼자 비율 추이(1970~2015년)



주: 1) 미혼율 = (연령별 미혼자 수/해당 연령층의 여자 인구)×100  
 2) 1970~2010년은 전수조사, 2015년은 표본조사 인구수를 토대로 산출한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여기에서는 출산력 조사와 통계청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초혼 연령은 특정 연도에 초혼을 신고한 사람

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동태적 개념인 데 반해 출산력 조사는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 개념이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sup>2)</sup> 출산력 조사의 정

2) 여기에서 사용된 정태적 초혼 연령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MAM(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SMAM은 현재의 연령별 미혼자 비율을 토대로 50세까지 살게 되는 평균 미혼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산력 조사상의 정태적 초혼 연령은 기혼 설문 응답자의 평균 초혼 연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오영희 등(2016)에 따르면 이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산력과 결혼 시기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평균 초혼 연령 산출 방식은 미혼자를 분석에서 제외한다는 점과 연령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태적 초혼 연령은 코호트의 누적으로 통계청의 초혼 연령보다는 낮게 나타나지만 증가 폭은 유사하다. 즉, 2000~2015년 출산력 조사상의 초

혼 연령은 23.5세에서 26.8세로 3.3세 상승하였으며, 통계청의 초혼 연령은 26.5세에서 30.0세로 3.5세 상승하였다.

표 1. 여성(15~49세)의 연도별 평균 초혼 연령 추이(2000~2015년)

(단위: 세)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출산력 조사	23.5	23.8	24.4	25.4	25.5	26.8
통계청	26.5	27.3	27.8	28.7	29.4	30.0

자료: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 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1 재구성.

한편, 앞서 살펴본 여성의 결혼 행태에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결혼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의 하위 개념으로 결혼, 이혼, 재혼, 동거 등에 대한 견해, 적정 결혼 연령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서는 결혼 적정 연령과 결혼 필요성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법률혼, 부부간 출산 중심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 시기는 가임 기간의 증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그림 3>은 주혼인연령군에 해당하는 25~29세, 30~3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2000~2015년 25~29세 기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필수적 인식(반드시 해야 함)은 13.9%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후에 2015년 14.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유보적 인식(하지 않는 편이 좋음)은 3.8%에서 4.5%로, 긍

정적·유보적 인식(하는 편이 좋음)은 30.4%에서 43.5%로 증가하였고, 선택적 인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음)은 51.3%에서 36.8%로 감소하였다. 30~34세 기혼 여성은 더욱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 같은 기간 필수적 인식은 13.9%에서 9.7%로 감소하였고, 부정적·유보적 인식은 4.8%에서 5.0%로 증가하였다. 긍정적·유보적 인식은 31.1%에서 38.0%로 증가하였으며, 선택적 인식은 2000년 49.9%에서 2012년 33.3%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46.9%로 급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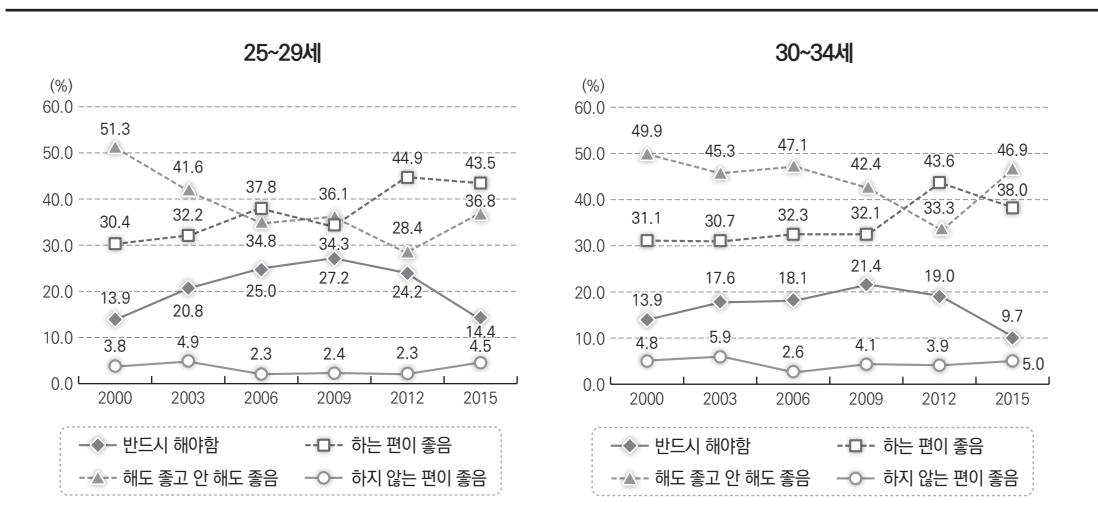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유보적 인식과 선택적 인식이 서로 상반된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의 변화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유보적 인식이 선택적 인식으로 유입되면서 결혼을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의 차원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정적·유보적 인식과 필수적 인식에서도 유

사한 패턴이 보이며 두 인식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또한 30~34세 기혼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결혼에 대한 필수적 인식의 급감과 선택적 인식의 급증 현상은 주혼인

연령군이 35~39세로 더욱 고연령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혼 여성이 인식하는 적정 결혼 연령 평균과 실제 초혼 연령의 변화는 가치관과 행태의 차이

그림 3.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양상(2000~2015년)



자료: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 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4~135 재구성.

가 점차 미미해지는 현상을 잘 보여 준다. 여기에서 적정 결혼 연령은 '가치관'에 해당하며, 통계청의 동태적 평균 초혼 연령은 '행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4>에서는 적정 결혼 연령과 통계청의 초혼 연령 자료를 함께 제시하

였다. 기혼 여성이 인식하는 여성의 적정 결혼 연령과 실제 초혼 연령의 차이는 2006년 0.6세였으나, 2015년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30.0세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기간 기혼 여성이 인식하는 남성의 적정 결혼 연령과 실제 초혼 연령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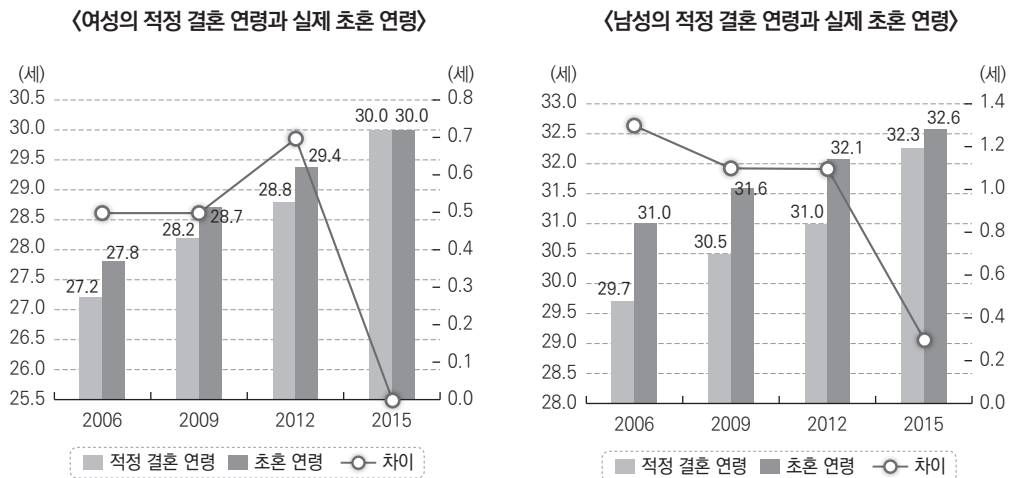
3) 한국의 생애미혼율(50세까지 결혼한 적 없는 사람의 비율로 45~49세와 50~54세 미혼율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생애미혼율은 1985년 남성 0.5%, 여성 0.3%에서 2000년 남성 1.8%, 여성 1.4%, 2015년 남성 10.9%, 여성 5.0%로 급증하였다. 특히, 2015년 현재 주혼인연령군을 지난 35~39세 남성 33.0%, 여성 19.2%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나 만혼화와 비혼화의 추세를 보여 준다(통계청, 각 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이 또한 2006년 1.3세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 이르러서는 0.3세로 나타났다. 즉, ‘가치관’과 ‘행태’가 점차 유사해지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결혼·출산 행태 분석과 예측에서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이는 이미 혼인을 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로,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sup>4)</sup>

그림 4. 기혼 여성(15~49세)이 인식하는 적정 결혼 연령 평균과 실제 초혼 연령 변화(2006~2015년)



주: 출산력 조사의 적정 결혼 연령 문항은 2006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음.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3. 기혼 여성의 출산 행태와 자녀가치관 변화

우리나라 여성의 주출산연령군은 2005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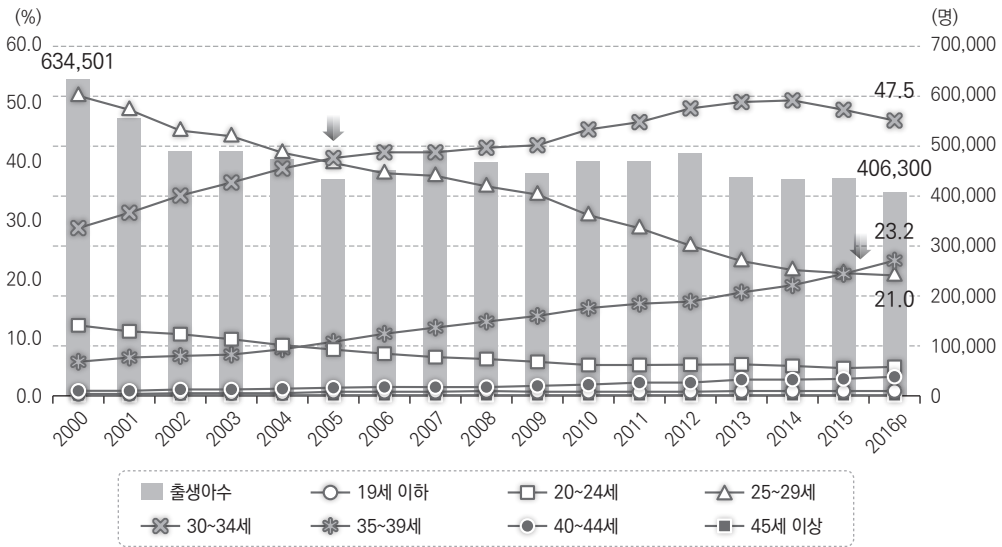
기점으로 25~29세에서 30~34세 연령군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부터는 25~29세보다 35~39세 연령군의 출산이 더 높은 비율을 보

4) 결혼 필요성(결혼을 해야 한다)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는 전체 여성의 경우 61.1%(2008) > 59.1%(2010) > 56.6%(2012) > 52.3%(2014)인 반면 미혼 여성은 46.5%(2008) < 46.8%(2010) > 43.3%(2012) > 38.7%(2014)로, 미혼 여성이 결혼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통계청 보도자료(2016. 6. 28.).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며, 이 시기부터 30~34세 연령군의 출산 비율도 감소해 주출산연령군 또한 주혼인연령군과 마찬가지로 35~39세로 이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주출산연령군과 주혼인연령군의 이행 경향성이 유사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

이 부부간 출산 중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 명에서 2016년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여성의 연령별 출생 구성비와 출생아 수 변화(2000~2016년)



주: 1) 2016p는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출생사망통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7.9.4. 인출.

한편, 이러한 여성의 출산 행태에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자녀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의 일부로 출산의 필요성, 성별 선호, 자녀수 등을 포괄하는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기혼 여성의 현존자녀수와 함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기혼 여성의 행태, 개인적인 인식, 사회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상자녀수는 일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기대자녀수는 기혼 여성 자신의 현존자녀수에 향후 계획한 자녀수를 합산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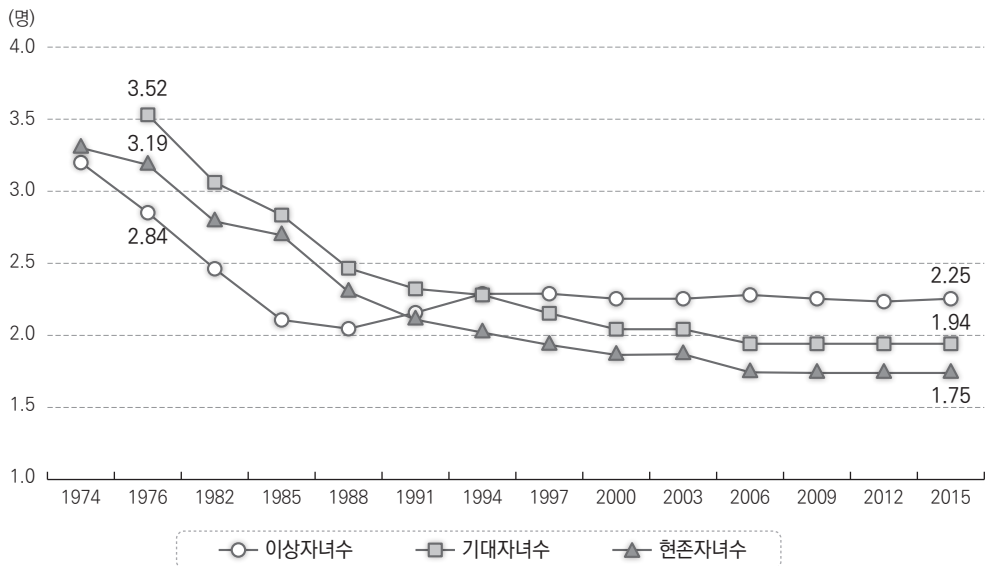


‘개인적인 인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존 자녀수는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의 수로 완결출산력의 의미는 아니지만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1974~2015년 기혼 여성(15~49세)의 평균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1970년대 3명 내외로 유지되던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가 2015년 현시점에서는 2명 내외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현존자녀수는 1974년 3.31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감소하였다.<sup>5)</sup>

그림 6. 기혼 여성(15~49세)의 평균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추이(1974~2015년)



자료: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 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0.

〈표 2〉는 이를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자녀 가치관의 변화를 개인적 인식, 사회적 인식, 행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정책 변화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1974~1988년에는 개인적 인식 > 행태 > 사회적 인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계획 10개년 사업(1962~1971년) 및 인공유산 합법화(1973년) 등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는 다자녀관 불식을 지향하는 반면 출산에 대한 기혼 여성의 개인적 인식은 정책 목표를 수용하지 못한 상태로, 행태는 과도기적

5)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 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0



으로 그 중간에 머물러 있다. 그 후 1991년에는 사회적 인식과 행태가 일치하나 개인적인 인식은 여전히 가장 높은 상태였다. 1994년에는 장기적인 인구억제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인식이 일치하는 가운데 행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변화하여 기혼 여성의 두 자녀 규범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기로 보인다.

반면, 1996년부터 출산억제정책을 철폐하고, 인구자질향상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1997~2015년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은 사회적 인식 > 개인적 인식 > 행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인식은 1994년부터 2.25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출산에 대한 기혼 여성의 개인적인 인식이 행태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개인적인 인식과 행태가 하향 또는 상향의 방식으로 유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출산에 대한 여성 개인의 인식은 행태보다 다소 높으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출산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여성의 결혼·출산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6)</sup>

표 2.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가치관과 인구정책 변화

구분	1974~1988년	1991년	1994년	1997~2015년
자녀수 변화	기대 > 현존 > 이상	기대 > 이상 = 현존	이상 = 기대 > 현존	이상 > 기대 > 현존
가치관 변화	(개인 > 행태 > 사회)	(개인 > 사회 = 행태)	(사회 = 개인 > 행태)	(사회 > 개인 > 행태)
인구정책 변화	← 인구억제정책기(1962~1995년) →			인구자질향상정책기 (1996~2003년) 출산장려정책기 (2004년~현재)

주: 1) '='는 자녀수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0.04명 미만 차이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의미함.

2) 기대자녀수는 개인적인 인식, 현존자녀수는 행태, 이상자녀수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규정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 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0 재구성.

<표 3>은 기혼 여성(15~49세)의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평균 현존자녀수,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sup>7)</sup>

6) 2015년 출산력 조사(이삼식 등, 2015)에서 미혼 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필요한 결혼정책을 조사한 결과, 청년 고용 안정화(28.6%), 신혼집 마련 지원(24.1%),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20.3%), 청년 실업 문제 해소(16.5%) 순으로 나타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고용, 소득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01  
7) 이상자녀수의 추이는 연도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경제활동 상태별로 차이가 거의 없어 설명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5~49세 기혼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2000년에는 15~24세 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1.69명)와 45~49세 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2.44명)의 차이가 0.75명이었으나 2015년에 이르러서는 단 0.23명으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현존자녀수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이는 특히 45~49세 여성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급감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연령군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1.98명으로, 평균 현존자녀수는 2.44명에서 1.96명으로 감소하였다. 45~49세 연령군이 출산이 완결되는 완결출산력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감안하였을 때, 10년 사이 3자녀관에서 2자녀관 미만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별로는 여전히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자녀수와 현존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유지 되지만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수의 차이가 급감하였다. 즉, 2000년에는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여성과 대학 이상인 여성의 기대자녀수 차이가 0.72명, 현존자녀수 차이가 1.02명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그 차이가 각각 0.18명, 0.42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초등학교 이하 여성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급감 현상이 있다. 먼저, 기대자녀수를 살펴보면 대학 이상 여성의 경우 2000년과

2015년에 동일하게 1.83명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초등학교 이하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2.55명에서 2.01명으로 감소하였다. 현존자녀수 또한 대학 이상 여성은 같은 기간 1.52명에서 1.59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초등학교 이하 여성의 경우 2.54명에서 2.0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초등학교 이하 여성 인구집단 자체의 급격한 감소 현상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sup>8)</sup>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대, 이상, 현존자녀수가 평균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유삼현(2014)은 여성의 교육 수준별 코호트 완결출산율(cohort complete fertility rate)의 추세 분석을 통해 고학력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출산력을 유지하던 저학력 여성의 출산력이 고학력 여성의 출산력보다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교육집단 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이 저하되었음을 보여 준다.<sup>9)</sup> 또한, 통계청(2017)에서 2000~2015년 교육 수준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0년대 이후의 출산율 감소 경향은 저학력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즉,

8) 출산력 조사의 초등학교 이하 기혼 여성의 비율은 1974년대 70.5%로 절대적인 수를 차지했으나 2000년 9.3%[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2016). 출산력 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7.], 2015년에는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8.].

9) Yoo, S. H.(2014).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cohort fertility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30, pp.1463-1493.

2000년에는 20~49세 대졸 이상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48명으로 고졸 여성의 1.51명보다 낮았으나 2015년에는 각각 1.32명, 1.02명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10)</sup>

이는 출산 기피 현상이 더 이상 고학력 여성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며, 여성의 교육 수준이 소득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경제력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즉,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의 문제보다는 육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질비용(real cost)’의 부담으로 인해 저학력(저소득) 여성의 출산 여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비취업 여성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취업 여성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가 취업 유무와 무관하게 유사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기혼 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별 평균 현존자녀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변화(2000~2015년)**

(단위: 명)

[기대자녀수]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전체 (대상자 수)	2.04 (6,336)	2.03 (7,151)	1.94 (7,277)	1.94 (6,224)	1.94 (7,264)	1.94 (9,913)
연령						
15~24세	1.69	1.73	1.76	1.89	1.77	1.75
25~29세	1.72	1.78	1.71	1.79	1.70	1.93
30~34세	1.93	1.94	1.86	1.88	1.91	1.86
35~39세	2.04	2.02	1.98	1.93	1.96	1.94
40~44세	2.07	2.06	2.00	1.99	1.96	1.96
45~49세	2.44	2.26	2.01	2.00	1.99	1.9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55	2.50	2.14	2.14	2.10	2.01
중학교	2.20	2.13	2.03	2.00	1.95	2.02
고등학교	1.96	1.99	1.96	1.99	1.98	1.91
대학 이상	1.83	1.89	1.86	1.86	1.90	1.83
경제활동 상태						
취업	2.11	2.07	1.96	1.93	1.92	1.95
비취업	1.98	1.99	1.92	1.95	1.96	1.94

10) 통계청 보도자료(2017. 5. 23.).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2000~2015년).

(표 계속)

<b>[이상자녀수]</b>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전체 (대상자 수)	2.26 (6,226)	2.26 (7,069)	2.28 (7,180)	2.26 (6,101)	2.22 (7,163)	2.25 (11,009)
<b>연령</b>						
15~24세	2.14	2.17	2.22	2.23	2.06	2.18
25~29세	2.09	2.15	2.13	2.19	2.13	2.21
30~34세	2.24	2.24	2.19	2.23	2.20	2.19
35~39세	2.27	2.25	2.27	2.25	2.21	2.21
40~44세	2.30	2.28	2.31	2.27	2.24	2.26
45~49세	2.38	2.34	2.39	2.30	2.26	2.30
<b>교육 수준</b>						
초등학교 이하	2.40	2.45	2.41	2.38	2.21	2.33
중학교	2.32	2.25	2.35	2.25	2.19	2.24
고등학교	2.23	2.23	2.27	2.28	2.22	2.23
대학 이상	2.21	2.26	2.25	2.22	2.23	2.23
<b>경제활동 상태</b>						
취업	2.29	2.28	2.30	2.27	2.23	2.25
비취업	2.23	2.24	2.25	2.25	2.22	2.23
<b>[현존자녀수]</b>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전체 (대상자 수)	1.87 (6,226)	1.88 (7,069)	1.76 (7,180)	1.75 (6,101)	1.75 (7,163)	1.75 (11,006)
<b>연령</b>						
15~24세	0.77	0.68	0.66	0.72	0.88	0.71
25~29세	1.10	1.11	0.92	0.92	0.79	0.73
30~34세	1.75	1.70	1.56	1.48	1.48	1.48
35~39세	2.00	1.97	1.89	1.84	1.85	1.85
40~44세	2.06	2.04	1.98	1.96	1.93	1.92
45~49세	2.44	2.25	2.00	1.99	1.98	1.96
<b>교육 수준</b>						
초등학교 이하	2.54	2.48	2.13	2.09	2.02	2.01
중학교	2.17	2.09	1.99	1.94	1.86	1.83
고등학교	1.77	1.84	1.82	1.85	1.87	1.81
대학 이상	1.52	1.62	1.57	1.59	1.64	1.59
<b>경제활동 상태</b>						
취업	1.96	1.93	1.75	1.76	1.74	1.73
비취업	1.79	1.82	1.78	1.75	1.77	1.75

자료: 1)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해원(2016). 출산력 조사(1976-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9, pp.191-192 재구성.  
 2)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4. 기혼 여성의 저출산정책 욕구 변화

출산력 조사에서 저출산 및 가족정책에 대한 욕구 조사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던 시점인 2003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연차별로 문항이 상

이하여 추이를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의 결과인 2009~2015년도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2009년 문항의 상이성으로 인해 2012, 2015년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sup>11)</sup>

표 4. 기혼 여성(15~49세)의 저출산 해소 정책 선호도(2009~2015년)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2년	2015년
결혼 지원 정책	-	13.0	12.9
임신·출산 지원 정책	12.3	15.1	3.8
양육의 경제적 지원	33.9	48.4	45.9
양육 인프라 확대	23.8	10.7	14.1
일·가정 양립 지원	22.4	11.7	19.3
기타 가족 생활 지원	7.6	1.1	4.1
전체 (대상자 수)	100.0 (9,711)	100.0 (6,245)	100.0 (9,913)

주: 1) 2012년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이고, 2015년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어떠한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인지에 대한 문항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2) 기타 가족 생활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자금 대출, 주거수당, 다자녀 실직가정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됨.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표 4〉를 보면 여전히 양육의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나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2012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양육 인프라 확대는 10.7%에서 14.1%로, 일·가정 양립 지원은 11.7%에서 19.3%로 양육 정책에 대한 욕구는 크게 상승한 반면, 임신·출산 지원 정책 욕구는 15.1%에서 3.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외에 기타 가족 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 또한 1.1%에서 4.1%로 증가하였고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해소 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이 양육정책임을 시사한다. 실질적으로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기혼 여성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자원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의 안정성,

11) 2009년에는 자녀의 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나,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양육의 경제적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의 선택지가 편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타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2009년의 결과는 참고 차원에서 제시하였을 뿐 비교하여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대, 일·가정 양립 정책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이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는 감소한 반면 양육 인프라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욕구가 상승한 것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양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혼인연령군은 25~29세에서 30~34세로 점진적으로 이행하여 만혼화와 비혼화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혼인연령군(30~3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최근 들어 긍정적·유보적 인식이 선택적 인식으로 유입되면서 결혼을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혼 여성이 인식하는 적정 결혼 연령과 실제 초혼 연령의 변화는 결혼가치관과 행태가 점차 유사해지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결혼·출산 행태 분석과 예측에서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가치관의 특성상 혼인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요건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요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결혼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만혼화에 따라 주출산연령군 또한 25~29세에서 30~34세로 이행하였으며,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였다. 자녀가치관에서 이상자녀수, 개인자녀수, 현존자녀수를 사회적 인식, 개인적 인식, 행태로 규정하여 살펴본 결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개인적인 인식(기대 수준)은 높으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기혼 여성의 출산 지연과 소자녀관 또는 무자녀관은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혼인과 출산 의지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단편적인 결혼비용 지원, 임신·출산 지원 정책 등의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차원보다는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 일·가정 양립 문화 형성, 주거 대책 강화 등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자녀수와 현존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유지되었으나, 저학력 여성과 고학력 여성의 자녀수 차이는 지난 10여 년간 급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저학력 여성의 급속한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 감소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기피 현상이 더 이상 고학력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의 대리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

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이후에는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의 문제보다는 저학력(저소득) 여성이 육아 과정에서 소요하게 되는 ‘실질비용’의 부담 문제가 출산 여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양질의 양육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양육 인프라 제공 확대가 중요할 것이다.

넷째, 상기한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기혼 여성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욕구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 욕구는 감소한 반면, 양육 인프라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성이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경제력을 확보하여 더 나은 수준의 양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적 영역의 양육정책 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